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

최유석* · 최창용**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의 질과 관련 요인을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 등 4가지 조건요인 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각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한국사회가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으며, 사회적 포용성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절반이 채 안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의 질과 관련된 요인으로 결혼상태, 학력, 고용형태, 주관적 계층이 밀접한 관련성을 맺었다. 사회의 질에 대한 4가지 조건요인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사회의 질,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 생활만족

* 이 글은 2019년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 2020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토론자로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신인철, 박승민 교수님,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KDI와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2008-002)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 주저자,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yschoi@hallym.ac.kr)

*** 교신저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cychoi@kdischool.ac.kr)

1. 서론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심수진, 2016).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장지연, 이병희, 2013; 이병희, 2014). 최근 포용적 성장 또는 포용적 복지의 등장은 불평등 완화 등 국내외 정책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다. 포용적 복지는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집단에 주목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8; OECD, 2011, 2016).

유럽연합에서는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럽통합 이후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현실이 어떠한지,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Beck et.al., 1997; Abbott & Wallace, 2012). 사회의 질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사회의 질을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 등 4가지 분면 또는 조건요인으로 구분하고, 지표를 개발하여 국가 간 특성을 비교하였다(Beck et.al., 1997; van der Maesen & Walker, 2005; Abbott & Wallace, 2012, Lin & Li, 2017). 또한 사회의 질과 각국 국민의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성도 탐색하였다(Yuan & Golpelwar, 2013; Abbott et.al., 2016).

사회의 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은 한국사회에서도 이루어졌다(정진성 외, 2009; 정해식, 2013; 이재열 외, 2015). 유럽연합의 사회의 질과 관련된 개념과 지표를 발전시켜 한국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작업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정진성 외, 2009; 정해식, 2013; 이재열 외, 2015). 국가 간 비교에서는 엄밀한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사회의 질 지표가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별 평균은 한 국가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여건의 편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여건은 매우 상이하고, 개인이 가진 기회와 보유한 자원과 역량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의 질 또한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개인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밝히고, 사회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민들이 한국사회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주목하였다. 한국사회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제공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 이

러한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을 분석함으로써, 표준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작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사회 수준으로 집계된 지표가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활만족은 소득이나 지출과 같은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와 현실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2018년에 조사한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질을 살펴본 후 어떠한 요인이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생활만족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2절에서는 사회의 질과 생활만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룰 것이다. 3절에는 분석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4절에서는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서술하고, 한국사회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 사회의 질과 생활만족 간의 관련성을 밝힐 것이다. 5절에서는 분석결과를 논의하고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사회의 질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의 질은 통합된 유럽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Beck, et.al, 2001). 사회의 질에 관한 연구는 유럽 학자들이 유럽통합 이후 경제정책 우선의 전통적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시민의 욕구와 선호를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공정한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모색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Beck, et.al, 2001). 사회의 질 접근은 유럽사회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둔 미래지향적이고 규범적인 특성을 지닌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유럽 각국에서 유럽연합 공통의 좋은 사회의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개별 국가와 유럽연합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Beck, et.al, 2001).

사회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복리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사회, 경제,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Beck et.al, 1997; van der Maesen & Walker, 2005; van der Maesen & Walker, 2012; Tomlinson et.al., 2016).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아실현을 이루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니는 사회이다(정진성 외, 2009; van der Maesen & Walker, 2005). 좋은 사회는 개인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이다.

개인과 사회 발전이 균형을 이루고, 공식적인 사회제도와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지역사회, 가족, 집단에의 참여도 균형을 이루는 사회이다(정진성 외, 2009).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각종 사회제도에 접근할 수 있으며,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내면화하는데 필요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해야 한다(정해식, 2013; van der Maesen & Walker, 2005). 사회의 질 접근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사회적 역능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사회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을 1) 사회경제적 안전성, 2) 사회적 응집성, 3) 사회적 포용성 4) 사회적 역능성 등 4가지 분면 또는 조건요인으로 구성하였다(Beck et.al., 2001; van der Maesen & Walker, 2005; Abbott & Wallace, 2012).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이 연구의 설문항목도 4가지 조건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의 질의 4가지 조건요인과 세부 영역과 지표의 구성은 유럽국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정해식,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일부 설문항목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품위있는 생활을 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유한 상태이다(이재열, 2015; van der Maesen & Walker, 2005, Abbott & Wallace, 2012; Tomlinson et.al., 2016). 단지 괜찮은(decent) 임금을 받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전반에 걸쳐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Abbott & Wallace, 2012). 이 연구에서 재구성한 설문항목에는 재난, 사고, 빈곤, 실업 등 각종 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북한 등 외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생존경쟁과 불안한 삶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였다.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veness)은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회제도, 조직, 사회적 관계에 접근할 수 있고 통합되어 있는 정도이다(이재열, 2015; van der Maesen & Walker, 2005; Abott & Wallace, 2012; Tomlinson et.al., 2016). 사회적 배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회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들을 얼마나 차별없이 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Abbott & Wallace, 2012).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구성원이 다양한 제도나 기회구조에서 배제되지 않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 판단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이재열, 2015).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보건, 복지서비스의 충분성, 사회적 약자와 이민자에 대한 포용성, 정부의 인권 보호 노력 등의 항목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과 신뢰,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의 정도를 의미한다(Abbott & Wallace, 2012). 개인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가 안정

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가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둔 정도를 의미한다(이재열, 2015; van der Maesen & Walker, 2005; Tomlinson et al., 2016). 본 설문에서는 폭넓은 사회적 연대의 토대를 이루는 투명성, 신뢰, 공정성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역량 발휘 또는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용가능한 기회를 실제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재열, 2015; Abbott & Wallace, 2012; Tomlinson et al., 2016). 이 연구의 설문에서는 개인의 능력 발휘, 의사결정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의 질의 개념과 구성 영역은 선진 유럽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가다듬어진 것이다(정해식, 2013; 이재열, 2015). 복지국가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안전성, 동질성이 높은 소규모 국가의 높은 사회적 신뢰, 보편적 복지에서 보이는 사회적 포용성,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보장 등은 북유럽 복지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여 구성된 지표들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기준에 비추어보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사회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의 질을 개념화하는 노력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예: 이재열, 2015).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의 질 연구에 기반하여 관련된 개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탐구하였다.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이론틀을 구축하고,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둔 엄밀한 측정 지표와 척도를 구성하는 작업은 향후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한다.

2) 사회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검토

유럽에서는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삶의 질 지표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의 질 이론에 기반을 둔 타당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연구 과제였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체계적인 사회의 질 지표 개발은 유럽 14개국 연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사회의 질 지표 개발 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s on Social Quality Indicators)의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이들은 사회의 질 4가지 조건요인을 18개 영역, 49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95개 지표를 개발하고, 소속 국가의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사회의 질 지표는 국가, 도시, 지역사회 수준에서 집계된 정보(예: 주민 1만명 당 의사수, 공공부조 수급률)와 표준화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이

는 국가 간, 지역사회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정책당국자와 시민들이 사회의 질의 변화를 추적하고, 관련된 사회경제정책이 사회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사회의 질이 상대적으로 지체된 영역을 진단하고, 각 영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탐색할 수 있다.

사회의 질 지표를 활용한 경험적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의 질 지표를 통해 각국의 사회의 질의 수준과 양상을 밝히고 비교하는 연구이다(정해식, 2013; 정해식, 안상훈, 2015, 이재열, 2015), 한국에서도 사회의 질 지표 또는 사회통합지표를 통해 한국사회의 질 또는 사회통합의 양상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노대명 외, 2010; 정해식, 2013; 김미곤 외, 2014). 둘째, 사회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국가 수준에서 집계된 거시적 통계자료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각종 사회 집단 별로 사회의 질의 4가지 조건요인의 양상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남은영, 2015). 셋째, 사회의 질의 영향 또는 효과를 밝히는 연구이다.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 등과 관련을 맺는지를 규명하는 연구이다(우명숙 외, 2013; 이재열, 2015; Abbott & Wallace, 2012). 이 유형의 연구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통해 사회의 질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Yuan & Golpelwar, 2013; Abbott et.al. 2016).

사회의 질 이론에 기반한 한국에서의 초기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 4가지 조건요인과 관련된 국가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정진성 외, 2009).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사회적 응집성과 관련된 신뢰와 투명성(이재열, 2009),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관련된 직업안정성과 직무만족(장진호, 2009) 등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의 질 분석틀이 활용되었지만 사회의 질의 각 조건 영역별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의 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깊어지면서 사회의 질 구성요소별 연구가 심화되었다(이재열 외, 2015).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진단하고(남은영, 2015),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의 응집성의 양상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다(정해식, 안상훈, 2015).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차별요인의 변화를 추적하고(정병은, 2015), 사회적 역능성 지표를 활용하여 지식기반 영역에서의 인터넷 접근, 미디어 활용 등을 국가 별로 비교하였다(김주현, 2015).

이러한 사회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한 이론적 성취와 방법론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질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에도 사회의 질의 4가지 조건요인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사회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개인 간 사회

의 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혀내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밝히는 연구도 드물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이다. 실제 국민들이 경험하는 한국사회의 질을 4가지 조건요인 별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이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관련을 맺는지,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과 관련을 맺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3) 사회의 질과 관련된 요인

한국사회의 질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롯한 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조건요인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보유한 사회경제적 자원,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관련을 맺을 것이다(Abbott & Wallace, 2012). 이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고용형태, 주관적 계층인식, 정치성향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각 독립변수 별로 4가지 조건의 사회의 질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다음과 같이 가설적인 형태로 탐색하였다.¹⁾

먼저 성별에 따라 사회의 질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남성의 경제력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포용성에 대해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포용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응집성은 성별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사회적 역능성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평가할 것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승진기회 등 자아실현의 기회를 더 많이 얻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과 경력개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 별로는 40, 50대 중년층일수록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들은 20대와 30대, 노인세대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

1)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소득을 구간형태로 조사하였다. 소득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 모두 독립변수로 활용하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소득을 제외하고,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득과 계층의식을 모두 투입하여 생활만족도를 분석결과에서도 소득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문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포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찬성하고 이민자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응집성을 높게 인식할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식, 2015).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고연령층에서 사회적 결속과 연대를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에 대해서도 연령대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회적 역능성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평가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상태와 관련하여 미혼, 이혼, 사별 집단은 기혼자에 비해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이들 집단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는 기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혼, 이혼, 사별 집단은 기혼자에 비해 사회적 포용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회의 복지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노력이 이들의 기대수준과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혼, 이혼, 사별 집단은 사회적 응집성도 기혼집단에 비해 낮게 평가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혼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김이수, 2016). 이들은 한국사회의 신뢰, 기회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학력과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간의 관계는 양방향에서 모두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가진 점을 고려하면, 고학력일수록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높은 기대수준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고학력의 젊은 응답자들은 자신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은 경험적 검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학력에 따라 사회적 응집성을 상이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고학력자의 경우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기대수준에 미달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를 낮게 평가하였다(정해식, 2015). 학력과 사회적 역능성 간의 관계도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역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와 자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지식과 기술 수준이 높고, 취업 및 직업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안정옥, 2009; 오준범, 이준협, 2014).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역능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 고학

력자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열망하는 지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지만,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비경제활동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높게 인식할 것이다. 경제활동 여부는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인식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경제활동을 할수록 사회적 역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과 직업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안정옥, 2009).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일수록 사회적 포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등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포용성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일수록 사회적 역능성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규직일수록 안정된 직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실하게 실현할 기회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안정옥, 2009).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결합된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생겨난다(김재우, 2019). 상위계층에 속할수록 한국사회의 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상위계층일수록 자신이 성취한 지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사회적 환경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김재우, 2019). 따라서 상위계층일수록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반면, 하위계층의 경우, 불안한 경제적 지위, 부족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위계층일수록 사회적 응집성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상위계층일수록 자신의 성취를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용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재우, 2019; Shepelak, 1987; Curtis & Andersen, 2015). 상위계층에 속할수록 삶의 기회가 공정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2016; 김이수, 2016; 이희정, 2018). 계층적 지위와 관련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도 높게 나타났다(정해식, 2015). 따라서 상위계층일수록 사회적 응집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신뢰와 기회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일 수 있다. 사회적 역능성의 경우에도 상위계층일수록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반면에 하위계층의 경우,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하위계층일수록 기회불평등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재우, 2019). 사회적 역능성의 경우에

도 하위계층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적 장벽에 직면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릴 것이다.

정치성향도 사회의 질과 관련을 맺을 것이다. 진보적일수록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이 낮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일수록 사회적 포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진보적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이민자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가 진행된 시점인 2018년 12월은 문재인 정부 초반기로서 자신의 정치성향이 진보라고 응답한 층에서 정부의 복지제공, 사회적 약자 보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진보적일수록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낮을 것이다. 진보적일수록 한국사회의 신뢰, 공정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을 것이고, 이러한 기대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진보적일수록 사회적 신뢰를 낮게 평가하였다(정해식, 2015). 진보적일수록 정치활동의 공정성,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였다(김이수, 2016).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사회적 개방성과 계층 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며, 사회적 역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 사회의 질에 관한 인식과 생활만족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가? 좋은 사회는 결국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회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사회는 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우명숙 외, 2013). 개인이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구조(capability structure)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Abbott & Wallace, 2012).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또는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의 조건이나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 평가 또는 사회경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Liang 1984; Landesman 1986; Veenhoven 1996).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자의적 인식과 평가, 특히 최근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수준의 변수로서 사회의 질의 영향에 주목한다. 한 국가의 사회구조적 여건은 개인의 생활만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Radcliff, 2001; Pacek & Radcliff, 2008).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은 개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공정성, 사회적 신뢰 등의 사회구조적 속성은 국가 간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다(Abbott & Wallace, 2012; Helliwell et.al., 2016). 국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안정적인 여건에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회일 것이다(Abbott & Wallace, 2012). 따라서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포용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또한 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사회일수록 국민의 생활만족도가 높다(Bjornskov et.al, 2008). 신뢰의 범위가 넓어서 타인에게 포용적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반면 국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된다(박희봉, 이희창, 2005; 김미곤 외, 2014; 심수진, 2016; Helliwell et.al., 2016). 따라서 사회적 신뢰와 응집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사회적 역능성도 생활만족도와 정(正)적인 관련성을 맺을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회가 충분한 사회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네 가지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회의 질의 다양한 조건요인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 무엇 인지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한국사회의 어떠한 측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집중하여 어떠한 구조적인 개혁이 가능한지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인구학적 속성과 생활만족

국가 수준의 제도적 속성은 해당 국가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다. 개인이 사회의 기회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Abbott & Wallace, 2012).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사회의 질과 관련된 요인으로 활용한 8가지 인구학적 요인이 생활만족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밝힐 것이다.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여부, 정규직 여부, 주관적 계층, 정치성향 등이 생활만족과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성별과 생활만족 간의 관련성은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김미곤 외, 2014; 심수진, 2016; 정해식, 우선희, 2017; Helliwell et.al. 2015).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재선, 서은국, 2011).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양상을 나타냈다(김미곤 외, 2014; 심수진, 2016; 박희봉, 이희창, 2005; 정해식, 우선희, 2017; 박승민, 2018). 공적연금이 발달한 외국의 경우, 청년기의 높은 생활만족도가 중년기에 들어서 점차 감소하다가 노년기에 생활만족도가 다시 높아지는 U자 모양을 띤다(박승민, 2018; Helliwell et.al. 2015), 그러나 한국의 노인은 은퇴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적고, 가족관계의 약화로 인해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희봉, 이희창, 2005; 구재선, 서은국, 2011; 심수진, 2016; 정해식, 우선희, 2017; 박승민, 2018).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 선택의 가능성이 높으며, 승진에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승민, 2018). 혼인상태와 관련하여 기혼집단이 미혼, 이혼, 사별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박희봉, 이희창, 2005; 심수진, 2016; 정해식, 우선희, 2017). 기혼집단의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생활경험이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1; Rayard, 2011).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박승민, 2018).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만족 간의 관계는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 그 자체 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생활만족과 관련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안주엽 외, 2017; 박승민, 2018). 좋은 직장에서의 근로활동은 개인의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저임금, 단순반복 업무의 고위험 일자리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안주엽 외, 2015; 정해식, 우선희, 2017). 일자리의 안정성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Layard, 2011), 가족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김미곤 외, 2014; 정해식, 우선희, 2017). 높은 계층적 지위에 속한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선택의 자유가 많으며, 자신이 성취한 지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미곤 외, 2014; 최유석, 2019).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 역시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윤인진, 김상돈, 2008).

정치성향과 생활만족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보수집단이 진보집단에 비해 행복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Schlenker et.al., 2012). 보수집단이 상대적으

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낙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Schlenker et al., 2012).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진보집단이 보수집단에 비해 높은 행복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Wojcik et al., 2015).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설문조사,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분석, 어휘분석과 같은 연구방법의 차이와도 관련을 맺는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성향과 집권정부의 정치성향 간의 조응성에 주목한다. 조사시점인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정치성향과 개인의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보정부 집권기에는 진보성향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으며, 반면에 보수정부 집권기에는 보수성향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²⁾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의미에서 정치성향과 생활만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다. 표본은 인구센서스 비율에 맞추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성인 1,000명을 층화표집하였다. 조사는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수행되었고, 조사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측정

이 연구에서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은 1) 사회경제적 안전성(안전과 위험), 2) 사회적 포용성(복지와 사회통합), 3) 사회적 응집성(공정성과 신뢰), 4) 사회적 역능성(개인의 능력과 참여) 등 크게 4가지 조건요인 별로 탐색하였다.

유럽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의 질 지표 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재정자원, 주거 및 환경, 건강과 돌봄, 노동, 교

2) 정치성향과 생활만족 간의 관련성을 좀더 엄밀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만족이 아니라, 정치상황에 대해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치성향과 일치하는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상황에 대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생활만족의 영역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여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육 등 5개 영역과 1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24개의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Keizer et.al. 2003, van der Maesen & Walker, 2005). 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재난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북한 등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빈곤의 위협에서 안전’, ‘실업 안전장치 마련’, ‘사업 실패 이후 재기의 어려움’, ‘불안한 삶’, ‘생존경쟁’ 등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은 0.65였다.

사회의 질 지표 네트워크에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시민권, 노동시장, 서비스, 사회연결망 등 4개 영역, 13개 하위영역, 27개 지표로 구성하였다(Walker & Wigfield, 2003; van der Maesen & Walker, 2005). 이 연구에서는 복지와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적 포용성은 ‘충실한 복지제도’, ‘충분한 보건서비스 제공’, ‘충실한 사회적 약자 보호’, ‘이민자 포용’, ‘정부의 사회적 약자 통합 노력’, ‘정부의 충실한 인권 보호’ 등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Cronbach's α 값은 0.7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응집성은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연결망, 정체성 등 4개 영역, 9개 하위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되었다(Berman et.al., 2004).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공정성과 신뢰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적 응집성은 ‘투명한 일처리’, ‘신뢰사회’, ‘대학진학의 공정성’, ‘취업의 공정성’, ‘공정한 세금 부과’, ‘공정한 세금납부’, ‘세대간 경제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공정사회’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은 0.87로 가장 높았다.

개인의 역량 및 참여와 관련된 사회적 역능성은 지식기반, 노동시장, 제도 공개와 시민 지원, 공공의 장, 개인관계 등 5개 영역, 12개 하위영역, 24개 지표로 구성되었다(Herrmann, 2003). 이 연구에서 사회적 역능성은 ‘중요한 의사결정 참여’, ‘지역 의사결정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충분한 능력발휘’ 등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은 0.74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응답자의 생활만족도는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1개 문항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여부, 고용형태,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성향 등 8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연령은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등 4가지 범주로 조사하였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등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고졸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등 4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경제활동과 고용형태는 각각 경제활동 여부와 정규

직 여부로 측정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최하층(1)에서 최상층(7)까지 7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하위계층(1-3), 중간층(4), 상위계층(5-7) 등 3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정치성향은 매우 보수적(1)부터 매우 진보적(5)까지 5개 범주로 측정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보수(1-2), 중도(3), 진보(4-5) 등 3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먼저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4개 조건요인에 속하는 25개 문항 별로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우리 국민들은 한국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각 영역 별로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를 중심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질에 관한 인식과 생활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빈도분석을 비롯한 각종 자료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은 1) 사회의 질과 관련된 요인, 2) 생활만족과 관련된 요인의 순서로 수행하였다. 먼저 사회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는 회귀분석에서는 4개 조건요인 별로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조건요인에 관한 인식이 높도록 일부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생활만족 회귀분석에서는 5점 척도로 측정한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서열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델1에서는 사회의 질 변수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등 8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모델2에서는 인구학적 변수와 함께 사회의 질 4개 조건요인의 평균값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두 모델의 비교를 통해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4. 분석결과

1) 응답자의 특성

[표 1]은 조사대상자 1,000명의 특성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50.8%와 49.2%이며,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1.3%, 20.3%, 60대 이상이 23.1%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거주자가 23.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부산이 각각 20.1%, 7.1%를 차지하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70.0%였으며,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8.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6.9%였다.

[표 1]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n=1,000, 단위 %)

	범주	%		범주	%	
성별	남성	49.2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0	
	여성	50.8		중학교 졸업	6.5	
연령대	20대	16.6		고등학교 졸업	38.2	
	30대	18.7		대학교 졸업	46.3	
	40대	21.3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5.0	
	50대	20.3	거주형태	자가	74.5	
	60대 이상	23.1		전세	17.1	
지역	서울	20.1		보증금 있는 월세	7.7	
	부산	7.1		보증금 없는 월세	0.4	
	대구	5.0	기타	0.3		
	인천	5.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7	
	광주	2.9		100~200만원 미만	8.0	
	대전	3.0		200~300만원 미만	16.4	
	울산	2.3		300~400만원 미만	17.7	
	세종	0.5		400~500만원 미만	22.2	
	경기	23.9		500~600만원 미만	12.0	
	강원	3.1		600~700만원 미만	8.3	
	충북	3.1		700~800만원 미만	4.4	
	충남	4.1		800~900만원 미만	2.3	
	전북	3.7		900~1000만원 미만	1.7	
	전남	3.6		1000만원 이상	3.3	
	경북	5.4		주관적 계층의식	1(최하층)	1.9
	경남	6.5			2	12.7
경제활동	예	70.0			3	32.4
					4(중간층)	38.1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58.3	5		12.3	
	일용직 임금근로자	4.3	6		2.2	
	임시직 임금근로자	11.4	7(최상층)		0.4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6.0	정치 성향	매우 보수적	2.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6.9		보수적	18.8	
	무급가족종사자	3.1		중도적	45.6	
정규직	예	90.9		진보적	29.4	
				매우 진보적	3.7	
혼인상태	기혼	68.3	생활만족도	1(매우 불만족)	3.1	
	미혼	26.5		2	12.8	
	이혼	2.4		3	48.0	
	사별	2.8		4	31.0	
		5(매우 만족)		5.1		
		평균(표준편차)		3.22(0.85)		

혼인상태는 68.3%가 기혼, 26.5%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가 46.3%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은 38.2%를 차지하였다. 거주형태 별로는 본인소유가 74.5%, 전세가 17.1%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대가 2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00만원대, 200만원대가 각각 17.7%, 16.4%를 차지하였다. 주관적 계층인식과 관련하여 중간층(4)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층(6~7)은 2.6%인 반면 하위층(1~2)에 속한다는 응답자는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하층(2~3)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45.5%)이 중상층(5~6, 14.5%)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정치성향과 관련하여 진보성향이 33.1%로 보수성향 21.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생활만족도 평균은 3.2로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약 36.1%로 불만족(1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

(1) 사회경제적 안전성: 한국사회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

[표 2]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국민들은 한국 사회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생존경쟁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재기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재난/사고, 군사적 위협, 빈곤, 실업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가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더 높게 나타났다. 북한 등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였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더 높게 나타났다. 빈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5%로서 각종 위험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은퇴 후 소득불안에 대한 걱정 등으로 국민들은 빈곤에 처할 위험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할 수 있다. 실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하였다. 반면 충실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8%로 과반수를 넘었다. 실업 후 재취업이 쉽지 않고 실업급여 수준과 수급기간 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빈곤 위험과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

사업실패 이후 재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대해서 거의 70%가 동의하였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52%가 동의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존경쟁에 시달린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인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회이다(이재열, 2015).

[표 2] 사회경제적 안전성: 안전과 위험 (n=1,000,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우리 사회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다	7.5	32.2	36.6	20.6	3.1	2.8 (1.0)
우리나라는 북한등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서 안전하다	9.6	28.4	38.4	18.6	5.0	2.8 (1.0)
국민들은 빈곤의 위협에서 안전하다	10.3	34.7	36.3	15.6	3.1	2.7 (1.0)
실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실히 마련되어 있다	17.0	41.0	24.9	14.0	3.1	2.5 (1.0)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	2.8	7.2	20.0	36.4	33.6	3.9 (1.0)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2.4	9.8	36.0	42.2	9.6	3.5 (0.9)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존경쟁에 시달린다	0.4	2.9	18.7	44.7	33.3	4.1 (0.8)

(2) 사회적 포용성: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표 3]은 사회복지와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적 포용성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제도와 보건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인식한 반면, 이민자 포용,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제도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36%가 동의하고 있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복지제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복지제도가 많이 확충되었지만 보장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서비스

[표 3] 사회적 포용성: 사회보장과 사회통합 (n=1,000,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제도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다	2.5	19.4	42.0	32.2	3.9	3.4 (0.9)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9	13.2	37.6	39.5	7.8	3.2 (0.9)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충실하게 보호하고 있다	8.8	31.1	39.1	18.2	2.8	2.8 (0.9)
우리 사회는 이민자를 포용하는 사회이다	7.5	30.0	40.2	19.4	2.9	2.8 (0.9)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6	21.9	42.9	28.0	2.6	3.0 (0.9)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 있다	5.8	21.4	41.9	28.7	2.2	3.0 (0.9)

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 47%가 동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양질의 건강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약자를 충실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1%였다.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40%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사회의 품격을 가늠하는 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이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이민자를 포용하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의견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 통합 노력에 대해서는 31%가 동의하였다.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 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동의비율도 사회적 약자 통합 노력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3) 사회적 응집성: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표 4]는 신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한국사회의 신뢰와 공정성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처리의 투명성과 세금의 공정납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일처리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동의비율은 16%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53%에 달했다. 우리 사회는 신뢰사회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22%에 그친 반면, 신뢰사회가 아니라고 인식

[표 4] 사회적 응집성: 신뢰와 공정성 (n=1,000,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우리 사회에서는 일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12.8	40.2	31.3	14.9	0.8	2.5 (0.9)
우리 사회는 신뢰사회이다	9.1	34.9	33.9	20.6	1.5	2.7 (0.9)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8.6	24.7	35.1	28.0	3.6	2.9 (1.0)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9.7	31.2	37.3	19.9	1.9	2.7 (1.0)
세금은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다	14.4	36.0	30.7	14.7	4.2	2.6 (1.0)
사람들은 세금을 공정하게 납부하고 있다	14.2	39.3	31.6	14.1	0.8	2.5 (0.9)
경제적 자원은 세대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	10.8	36.7	38.4	13.1	1.0	2.6 (0.9)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이다	9.9	30.4	41.0	18.0	0.7	2.7 (0.9)

하는 비율이 44%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올랐음에도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신뢰사회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회수준의 신뢰와는 달리, '사람들에 대한 신뢰(대인신뢰)'와 관련하여 45%가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별도 분석). 사람에 대한 신뢰는 사회수준의 신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2%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할 때, 대학진학의 공정성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신과 관련된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수시전형과 관련하여 공정성 시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쟁을 통한 좋은 일자리 획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22%였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41%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공기업 취업비리, 일자리 세습 논란 등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정한 세금 부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였고,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50%를 차지하였다. 국민들은 상위계층에게 세금이 낮게 부과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공정한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15%인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54%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민들은 세금 부과에 비해 세금납부의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세금부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반면,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동의비율은 13%에 불과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48%를 차지했다. 경제적 자원의 세대 간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모든 세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정사회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긍정적인 인식은 19%에 불과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인식이 40%였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투명성, 신뢰, 공정한 경쟁과 세금 부과, 세대 간 자원배분 등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4) 사회적 역능성: 개인의 역량 발휘에 대한 인식

[표 5]는 사회적 역능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개인의 역량발휘 항목 중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동의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지역 의사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응답은 32%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현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5] 사회적 역능성: 개인의 역량 발휘 (n=1,000,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5	12.7	40.9	36.0	7.9	3.3 (0.9)
내가 사는 지역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0	19.9	43.5	27.7	4.9	3.1 (0.9)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3	23.4	45.4	24.8	2.1	3.0 (0.9)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4.5	25.1	41.8	26.7	1.9	3.0 (0.9)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비율은 27%로 부정적인 인식과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은 29%로 부정적 인식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6]은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의 질과 관련된 4가지 조건요인은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은 모두 생활만족과 정적인 관련성을 맺었다. 기혼집단의 경우 비기혼집단(미혼, 이혼, 사별)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남성, 연령, 근로여부, 정치성향은 생활만족과 관련이 없었다.

사회의 질과 관련된 4가지 조건요인은 서로 정적인 관련성을 맺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사회적 포용성의 경우, 기혼집단이 비기혼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의 포용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정규직일수록,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사회적 포용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의 포용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표 6] 상관관계 분석결과

	생활 만족	사회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	남성	연령	기혼	교육 수준	근로	정규직	주관적 계층	정치 성향
생활 만족	1.000												
사회적 안전성	0.289 ***	1.000											
사회적 포용성	0.264 ***	0.448 ***	1.000										
사회적 응집성	0.226 ***	0.472 ***	0.534 ***	1.000									
사회적 역능성	0.251 ***	0.296 ***	0.406 ***	0.507 ***	1.000								
남성	-0.019	0.078 **	-0.024	0.046	0.022	1.000							
연령	0.003	-0.010	0.029	0.127 ***	-0.010	-0.052	1.000						
기혼	0.082 ***	0.046	0.058 *	0.118 ***	0.017	-0.035	0.535 ***	1.000					
교육 수준	0.098 ***	0.000	-0.065 **	-0.135 ***	-0.066 **	0.119 ***	-0.409 ***	-0.080 **	1.000				
근로	0.007	-0.044	-0.015	-0.004	-0.014	0.247 ***	-0.018	0.112 ***	0.195 ***	1.000			
정규직	0.058 *	0.074 **	0.056 *	0.057 *	0.048	0.163 ***	-0.216 ***	0.056 *	0.267 ***	0.503 ***	1.000		
주관적 계층	0.256 ***	0.141 ***	0.110 ***	0.126 ***	0.135 ***	0.083 ***	-0.124 ***	0.098 ***	0.287 ***	0.069 **	0.161 ***	1.000	
정치 성향	0.013	0.047	0.058 *	-0.023	-0.005	0.029	-0.110 ***	-0.071 **	0.159 ***	0.013	0.083 ***	-0.033	1.000

* p<0.1 ** p<0.05 *** p<0.01

사회적 응집성과 관련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집단일수록 사회적 응집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정규직일수록,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의 응집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사회적 응집성과 부적인 관련성을 맺었다. 사회적 역능성의 경우,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의 역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역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4가지 사회의 질 조건요인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을 맺는 요인을 좀더 엄밀하게 탐색할 것이다.

4) 회귀분석결과

(1)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관련된 요인

[표 7]은 사회의 질 4가지 조건 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관련 요인을 밝힌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평균점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별, 혼인상태, 학력, 경제활동 여부, 고용형태, 계층, 정치적 성향 등이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관련을 맺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기혼집단에 비해 미혼집단의 경우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미혼집단의 경우 기혼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직업안정성도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졸 이하에 비해 학력이 높은 고졸, 대졸집단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전성을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계층별로 상위계층은 중간층에 비해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위계층은 낮게 평가하였다. 상위계층일수록 근무 및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빈곤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반면 하위계층일수록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낮으며, 중간층에 비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빈곤과 실업의 위험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성향과 관련하여 보수적일수록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에 따르면 보수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북한 등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높다고 인식하고, 실업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고연령층인 보수성향 응답자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7] 사회의 질에 관한 인식과 관련된 요인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					
		b	s.e.	b	s.e.	b	s.e.	b	s.e.				
성별(여성)	남성	0.101	0.036	**	-0.042	0.040		0.067	0.044		0.032	0.043	
연령(60대 이상)	20대	0.137	0.084		0.146	0.094		-0.084	0.104		0.229	0.101	**
	30대	0.034	0.068		0.014	0.077		-0.158	0.085	*	0.059	0.083	
	40대	0.066	0.062		0.037	0.069		-0.138	0.077	*	-0.039	0.075	
	50대	0.030	0.059		-0.021	0.067		-0.136	0.074	*	-0.078	0.072	
혼인상태(기혼)	미혼	-0.132	0.059	**	-0.122	0.067	*	-0.146	0.074	**	-0.172	0.072	**
	이혼	-0.035	0.112		0.029	0.127		-0.019	0.140		0.120	0.136	
	사별	0.038	0.108		-0.156	0.121		-0.151	0.134		0.084	0.130	
학력(중졸 이하)	고졸	-0.181	0.070	**	-0.226	0.079	***	-0.192	0.087	**	-0.087	0.085	
	대졸	-0.162	0.075	**	-0.301	0.084	***	-0.337	0.093	***	-0.253	0.091	***
	대학원졸	-0.152	0.104		-0.255	0.117	**	-0.329	0.130	**	-0.120	0.126	
경제활동(안함)	경제활동	-0.148	0.045	***	-0.047	0.051		-0.065	0.056		-0.030	0.054	
고용형태(비정규직)	정규직	0.114	0.043	***	0.108	0.048	**	0.161	0.054	***	0.101	0.052	*
계층(중간층)	하위계층	-0.063	0.038	*	-0.109	0.043	**	-0.151	0.047	***	-0.147	0.046	***
	상위계층	0.200	0.052	***	0.191	0.059	***	0.179	0.065	***	0.123	0.063	*
정치성향(중도)	진보	-0.009	0.039		0.096	0.044	**	-0.085	0.048	*	-0.042	0.047	
	보수	-0.109	0.045	**	-0.023	0.051		-0.106	0.056	*	-0.095	0.055	*
상수		2.642	0.069	***	3.272	0.078	***	3.087	0.086	***	3.318	0.084	***
Adjusted R ²		0.048			0.038			0.065			0.040		

주: 괄호 안은 터미변수에서 기준 범주를 나타냄, * p<0.1 ** p<0.05 *** p<0.01

(2)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된 요인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하여 혼인상태, 학력, 고용형태, 계층, 정치성향이 관련을 맺었다. 미혼 집단은 기혼집단에 비해 사회적 포용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미혼집단은 저출산 대책 등 복지정책과 기업복지의 혜택이 주로 기혼집단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집중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력별로 고졸이상의 학력집단은 중졸이하 집단에 비해 사회적 포용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수준과 사회적 약자와 이민자 통합, 인권 보호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이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경우 한국사회의 사회적 포용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인상, 승진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계층별로 상위계층은 중간계층에 비해 사회적 포용성을 높게 인식한 반

면, 하위계층은 사회적 포용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의 보건 복지제도의 충분성, 사회적 약자, 이민자에 대한 통합노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별도 분석). 정치성향과 관련하여 진보라고 응답한 집단이 중도집단에 비해 사회적 포용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진보집단은 보수성향에 비해 친복지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응집성과 관련된 요인

사회적 응집성 평균훈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령, 혼인상태, 학력, 고용형태, 계층, 정치성향이 사회적 응집성과 관련을 맺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0대 이상에 비해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과 관련된 사회적 응집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미혼집단의 경우 기혼집단에 비해 사회적 응집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이상 집단이 고졸미만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의 응집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고학력 집단은 공정경쟁을 통한 취업, 세금부과 및 납부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 수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세대 간 자원분배의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별도 분석). 이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으로서 세대 간 자원분배의 불균형과 기성세대의 기득권 점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사회적 응집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비정규직과는 달리 기회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상위계층은 중위계층에 비해 사회적 응집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위계층은 사회적 응집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하위계층의 경우 각종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취업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하위계층일수록 세금부과와 납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는 관련이 있다(별도 분석).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이 중도집단에 비해 사회적 응집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뢰사회, 세금부과와 납부, 세대 간 분배, 공정사회 인식 등의 문항에서 정치성향별 차이가 관찰되었다(별도분석). 응답자들은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대학진학과 취업경쟁의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부정적 인식은 문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진보집단은 세금부과와 납부, 세대 간 자원분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중도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반면에 보수집단은 세금부과, 세대 간 분배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일처리의 투명성, 공정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중도집

단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별도 분석). 이는 보수집단의 경우 진보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실행과정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사회적 역능성과 관련된 요인

사회적 역능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 혼인상태, 학력, 고용형태, 계층, 정치성향이 사회적 역능성과 통계적 관련성을 보였다([표 7] 참조). 20대는 60대에 비해 사회적 역능성이 높았다. 20대의 경우 고연령층에 비해 의사결정 참여와 능력발휘에 자신감이 높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미혼집단은 기혼집단에 비해 사회적 역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대졸집단은 중졸이하에 비해 사회적 역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사회적 역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고용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계층은 중위계층에 비해 사회적 역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위계층은 사회적 역능성에 대한 동의비율이 낮았다. 하위계층은 경제활동과 같은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설령 참여하더라도 권한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 보수성향 집단은 중도집단에 비해 사회적 역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보수집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회의 질 인식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

한국인의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은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밝히기 위해 서열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8]은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델1은 인구학적 변인만을 투입한 결과이고, 모델2는 인구학적 변인에 사회의 질 4가지 조건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사회의 질과 관련된 4가지 조건요인 중에서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3가지 조건요인 모두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성을 맺었다.³⁾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와 사회통합으로 측정된 사회적 포용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개인의 역량 발휘와 참여가 보장된 사회적 역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의 삶의 만족이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사회의 질 변수 4개를 각각 따로 투입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사회적 응집성도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성을 맺었다.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적 포용성을 비롯하여 다른 사회의 질 변수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가지 변수가 모두 동시에 회귀분석에 투입됨에 따라 사회적 응집성의 직접효과가 감소하여 통계적 유의도가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 변수 간의 관련성을 좀더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표 8] 사회의 질 인식과 생활만족도

		모델1		모델2		
		b	s.e.	b	s.e.	
성별(여성)	남성	-0.136	0.126	-0.214	0.128	*
연령(60대 이상)	20대	0.177	0.297	-0.074	0.304	
	30대	-0.279	0.241	-0.382	0.245	
	40대	-0.123	0.218	-0.205	0.222	
	50대	-0.128	0.209	-0.120	0.211	
혼인상태(기혼)	미혼	-0.478	0.215 **	-0.292	0.218	
	이혼	-0.438	0.399	-0.565	0.410	
	사별	-0.002	0.403	-0.016	0.396	
학력(중졸 이하)	고졸	0.013	0.245	0.305	0.248	
	대졸	0.312	0.264	0.710	0.270 ***	
	대학원졸	0.743	0.374 **	0.993	0.376 ***	
경제활동(안함)	경제활동	-0.177	0.161	-0.034	0.163	
고용형태(비정규직)	정규직	0.215	0.154	0.058	0.156	
계층(중간층)	하위계층	-0.658	0.137 ***	-0.562	0.139 ***	
	상위계층	0.671	0.184 ***	0.440	0.189 **	
정치성향(중도)	진보	0.043	0.138	0.023	0.141	
	보수	0.064	0.160	0.174	0.162	
사회의 질	사회적 안전성			0.670	0.136 ***	
	사회적 포용성			0.384	0.129 ***	
	사회적 응집성			-0.031	0.121	
	사회적 역능성			0.474	0.113 ***	
상수1		-3.911	0.307	0.378	0.517	
상수2		-2.094	0.258	2.291	0.502	
상수3		0.297	0.247	4.876	0.521	
상수4		2.767	0.280	7.464	0.554	
Log Likelihood		-1191.5		-1138.3		
유사 R ²		0.0375		0.0805		

주: 괄호 안은 터미변수에서 기준 범주를 나타냄, * p<0.1 ** p<0.05 *** p<0.01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성별, 결혼상태, 학력,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박희봉, 이희창, 2005; 심수진, 2016; 정해식, 우선희, 2017)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모델2). 미혼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모델1). 미혼집단은 기혼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배우자 등 가족의 지지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박희봉, 이희창, 2005; 심수진, 2016; 정해식, 우선희, 2017; 김재우, 2019)와 맥을 같이한다.

대졸 이상 집단이 중졸 이하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모델2).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갖고 자아성취감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오준범, 이준협, 2014; 심수진, 2016). 계층적 지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상위계층은 중간계층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하위계층은 중간계층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계층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자원이 풍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많으며, 자아성취감이 높기 때문이다(오준범, 이준협, 2014).

모델1과 비교할 때 모델2에서는 성별, 미혼, 학력, 계층의 회귀계수 값이 변화한 점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질 변수가 투입된 결과, 계층의식의 회귀계수는 절대값 기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매개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회의 질 변수는 계층인식의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의 성격을 띤다. 계층별로 우리 사회의 기회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점유하는 자원의 차이가 사회적 안전성과 같은 사회의 질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5. 논의와 결론

한국사회는 성장한 경제에 걸맞는 좋은 사회가 되었는가? 성장의 양적 측면에 가려 사회구성원의 행복감은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는가?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초로서 사회구성원 간 연대와 통합에 대한 인식과 그 수준은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들의 한국사회의 질에 관한 인식을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 등 4가지 조건요인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관련하여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은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국민들이 한국사회를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퇴출 위험 등 실직가능성에 대한 높은 불안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남은영, 2015). 은퇴 후의 삶이 연장되면서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사회적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열 명 중 여덟 명은 일상적인 생존경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국민들 간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사회경제적 위협에 대응하여 복지영역에서 안전망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영역의 보장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안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관계의 불안정과 같은 일자리 불안은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정부정책이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더라도 복지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 등으로 파편화되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대내외 경쟁에 직면한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선택하는 현실에서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와 정부의 포용적 노동정책 간에는 괴리가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 신뢰까지 훼손하는 노동시장 분절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 간의 보완성을 고려하여 정책 간 연계와 포괄성의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아직 한국사회의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후한 점수를 주진 않았다. 국민들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 이민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복지제도가 좀더 충실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정부는 교육, 취업기회,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이 누구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포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Lord, 2019). 근본적으로 사회적 포용성 증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닌 사회구성원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박명규, 2018; 강수택, 2019). 따라서 포용적 심성을 길러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시민적 덕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박명규, 2018).

셋째, 신뢰와 공정성으로 측정된 사회적 응집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한국사회에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높은 사적 신뢰와 낮은 공적 신뢰의 문제를 갖고 있다(이재열, 1998, 2018). 국민들은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조세정의와 세대 간 경제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복지정책에 국한되어서는 한계가 있다. 고용, 승진, 과세의 공정성 등이 제고될 때 사회적, 제도적 신뢰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병진, 2007; 정해식, 안상훈, 2015). 기업의 고용관행, 하청관계 등 생산현장에서 당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입시, 취업, 병역 등과 같이 국민들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영역에서 공정성을 증진하는 것은 제도적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박병진, 2007).

넷째, 사회적 역능성과 관련하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절반이 채 안되었다. 특히 지역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역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사업 및 예산편성 등의 현안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실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성과를 체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Lord, 2019).

한편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3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 30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별도 분석). 이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한 노력과 투자에 비해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취업한 이후에도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역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국사회의 혁신과 창조적인 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서 청년세대에 의한 혁신과 창조적인 활동이 나올 사회적 기반은 취약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의 질과 관련된 요인으로 혼인상태, 학력, 고용형태, 계층인식이 밀접한 관련성을 맺었다. 해당 집단별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상이한 기회구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미혼집단, 비정규직, 하위계층일수록 각각 기혼, 정규직, 중간계층에 비해 한국사회의 질을 낮게 인식하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여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포용적 사회정책은 이들 집단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질에 대한 4가지 조건요인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유럽연합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Abbott & Wallace, 2011). 이러한 결과는 앞서 미혼, 비정규직, 하위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전반적인 사회의 질의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회의 질 인식이 낮은 집단을 포용하여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위계층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사회 전반에서 제도적 투명성, 공정성, 신뢰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의 질 개선노력은 하위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들이 한국사회의 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각 영역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보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실제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의 절대적 수준이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데서 비롯된 것인지를 보다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조건요인 간의 관련성을 좀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포용성, 응집성, 역능성 등은 서로 보완적인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충될 수도 있다. 좋은 사회는 모든 조건요인에서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영역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포용성은 상충될 수 있다. 복지정책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간의 논쟁도 안전성과 포용성 간의 상충관계와 관련이 있다. 예산제약 하에서 정책수요가 가장 높은 집단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별적 정책방향과 대상자의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정책방향이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거시적 수준의 사회의 질이 미시적 수준의 개인의 심성 또는 태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사회적 포용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

의 포용적 심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과 가족의 생존에 급급하여 포용적인 마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포용성의 증진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포용성을 증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개인의 가치관, 선호와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한 질문(예: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과 사회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이 혼재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조건영역 별로 관련을 맺는 요인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의 질에 대한 이론적 틀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고, 각 조건영역과 직결된 변수를 조사하여 사회의 질의 변량을 좀 더 충분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 변수와 인구학적 변수가 생활만족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는 사회의 질 변수가 인구학적 변수와 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계층인식이 사회의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질 인식이 다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사회의 질 변수가 인구학적 변수와 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계층인식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가 사회의 질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 변수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엄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할 한계가 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만족도는 상이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예: 일,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서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건강상태, 자유선택의 정도, 사회적 지지 등이 생활만족과 관련성을 맺었다(Layard, 2011; Helliwell et.al. 2020). 그러나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조사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긴밀한 관련성을 맺는 변수를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구혜란, 2015). 정책목표로서 사회의 질의 증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의 규범적 가치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의 질과 관련하여 각종 사회경제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와 정책을 통해 사회의 질의 향상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수택 (2019). 분열형 사회에서 연대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 *한국사회학*. 53(2). 137-165.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구혜란 (2015). 제1장 사회의 질: 이론과 방법. 이재열 외(편).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한울아카데미.
- 김미곤 외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수 (2016).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20(2). 123-152.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재우 (2019). 한국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기회공정성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도. *행정논총*. 57(4). 97-127.
- 김주현 (2015). 제5장 사회적 역능성. 이재열 외(편).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한울아카데미.
- 남은영 (2015). 제2장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이재열 외(편).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한울아카데미.
- 노대명, 강신욱, 전지현 (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 박명규 (2018). 1장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박명규, 이재열(편). 한울아카데미.
- 박병진 (2008).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박승민 (2018). 행복과 사회.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희봉, 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9.
- 심수진 (2016).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연구*. 21(3). 25-47.
- 안정옥 (2009). 사회적 역능성 지표와 사회의 질: 복지체계의 탈상품화 모델에 대한 함의. *사회와 역사*. 81. 169-211.
- 안주엽, 이경희, 길현중, 오선정, 김주영, 김종숙, 김난숙 (2015). 일과 행복(I).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 이경희, 오선정, 강동우, 김주영, 정세은, 손호성, 박진, 이선연, A. Clark, G. F. Barrett, F. Ohtake, K. Atalay (2017). 일과 행복(III). 한국노동연구원.
- 오준범, 이준협 (2014).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현안과 과제. 14(34). 현대경제연구원.
- 우명숙, 김길용, 조병희, 유명순 (2013). '좋은 사회'는 삶의 만족을 높이는가?. *국제지역연구*. 22(2). 87-120.
- 윤인진, 김상돈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21(2). 153-185.
- 이병희 (2014).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 분석. *경제발전연구*. 20(1). 73-103.
- 이재열 (2009). 2장 무너진 신뢰, 지체된 투명성. 정진성 외(편).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읽는다: 국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외환위기 10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2). 3-29.
- 이재열 외 (2015).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한울아카데미.
- 이재열 (2018). 14장.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박명규, 이재열(편).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한울아카데미.
-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 장지연, 이병희 (2014).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71-109.
- 장진호 (2009). 3장 유연한 노동시장, 불안한 직장, 정진성 외(편).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읽는다: 국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외환위기 10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진성 외 (2009).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읽는다: 국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외환위기 10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해식 (2013).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 40(3). 233-268.
- 정해식 (2015).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 통합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21. 23-35.
- 정해식, 안상훈 (2015). 제3장 사회적 응집성: 현실과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이재열 외(편).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한울아카데미.
- 정해식, 우선희 (2017). 주관적 안녕의 추이와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337.
- 정병은 (2015). 제4장 사회적 포용과 배제. 이재열 외(편).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한울아카데미.
- 최유석 (2019). 한국인의 행복과 복지정책. 2019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5-51.
- Abbott, P. & C. Wallace. (2012). Social Quality: A Way to Measure the Quality of Society. *Social Indicator Research*. 108. 153-167.
- Abbott, P. C. Wallace, K. Lin, & C. Haerper. (2016). The Quality of Society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a. *Social Indicator Research*. 127(2). 653-670.
- Beck, W., van der Maesen & A. Walker. (1997). Theorizing Social Quality: The Concept's Validity. In Beck, van der Maesen & Walker, (eds).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ck, W.A., van der Maesen, F. Thomese & A. Walker. (eds). (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rman, Y. & D. Phillips. (2004). Social Quality and the Conditional Factor of Social Cohesion. 3rd draft Working Paper (June 2004). The European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msterdam.
- Bjornskov, C., A. Dreher & J. Fischer. (2008). Cross-country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exploring different determinants across groups in society. *Social Choice Welfare*. 30. 119-113.
- Curtis, J. & R. Andersen. 2015. How social class shapes attitudes on economic inequality: The competing forces of self-interest and legitim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Research*. 5(1). 4-19.
- Helliwell, J., Huang, H. & Wang, S. (2016). New Evidence on Trust and Well-being. NBER Working Paper No.22450.
- Helliwell, J., Layard, R., Sachs, J., & De Neve, J. (eds). (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0*.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rrmann, P. (2003). Social Quality and the Conditional Factor of Social Empowerment. 3rd draft Working Paper. Amsterdam: EFSQ (September 2003).
- Keizer, M. & L.J.G. van der Maesen. (2003). Social Quality and the Conditional Factor of Socio-Economic Security. 3rd draft Working Paper. Amsterdam: EFSQ (September 2003).
- Landesman, S. (1986). Quality of life and personal life satisfacti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issues. *Mental Retardation*, 24(3), 141-143.
- Layard, R. (2011).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정은아 역. 행복의 함정. 북하이브).
- Liang, J. (1984). Dimensions of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A Structural Formul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9(5), 613-622.
- Lin, K., & H. Li. (2017). Mapping Social Quality Clusters and Its Implications. *Social Indicator Research*, 134(2), 403-419.
- Lord, K. (2019). Six Ways to Repair Declining Social Trust, Stanford Innovation Review. https://ssir.org/articles/entry/six_ways_to_repair_declining_social_trust.
- van der Maesen, L.J.G. & Walker, A.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1/2), 8-24.
- van der Maesen, L.J.G. & Walker, A. (2012). *Social Quality: From Theory to Indicators*. Houndmills: Palgrave.
-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 OECD. (2016). *Income inequality remains high in the face of weak recovery*. COPE. Nov.
- Pacek, A. & B. Radcliff. (2008). Assessing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s of Happiness. *Perspectives on Politics*, 6(2), 267-277.
- Radcliff, B. (2001). Politics, Markets,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939-952.
- Schlenker, B. R., Chambers, J. R., & Le, B. M. (2012). Conservatives are happier than liberals, but why? Political ideology, pers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2), 127-146.
- Shepelak, N. J. (1987). The role of self-explanations and self-evaluations in legitimating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4), 495-503.
- Tomlinson, M., Walker, A. & Foster, L. (2016). Social Quality and Work: What Impact Does Low Pay Have on Social Quality. *Journal of Social Policy*, 45(2), 345-371.
- Veenhoven, R. (1996). Chapter 1. The Study of Life Satisfaction. Saris, W.E., Veenhoven, R., Scherpenzeel, A.C. & Bunting B. (eds). *A comparative study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Europe*. Eötvös University Press. 11-48.
- Walker A.C. & A. Wigfield. (2003). Social Quality and the Conditional Factor of Social Inclusion. 3rd draft Working Paper. Amsterdam: EFSQ (September 2003).
- Wojcik, S. P., Hovasapian, A., Graham, J., Motyl, M., & Ditto, P. H. (2015). Conservatives report, but liberals display, greater happiness. *Science*, 347(6227), 1243-1246.
- Yuan, H. & M. Golepelwar. (2013). Testing Subjective Well-being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Quality: Quantile Regression Evidence from Shanghai, China. *Social Indicator Research*, 113, 257-276.

◀ Abstract ▶

Perceptions on the Quality of Society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Youseok Choi* · Changyong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Korean society,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society, and to explore whether the perceptions of social quality are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 survey of 1,000 adults was conducted in December 2018 to examine the quality of society in four areas: socio-economic security, social inclusiveness, social cohesion, and social empowerment. Findings show that respondents evaluate that the overall quality of Korean society is not high. They answer that Korean society is not safe from dangers and Koreans live insecure lives. The public recognizes the level of social inclusiveness is low in Korean society. Regarding social cohesion, respondents answer that Korean society have low levels of social trust, transparency and fairness. With regard to social empowerment, less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are positive about being able to participate in important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employment types, and social clas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erceptions on the quality of society. Among the four conditional factors of social quality, socio-economic security, social inclusiveness, social cohesion, and social empowermen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We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society.

Keywords: quality of society, life satisfaction

◆ 2020. 08. 07. 접수 / 2020. 09. 07. 1차수정 / 2020. 09. 11. 게재확정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yschoi@hallym.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cychoi@kdischool.ac.kr)